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 행복한 국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가지 흉악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우리의 치안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합니다. 치밀한 예방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총체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먹을거리 안전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새누리의 진단

- 성폭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여 2차 피해 발생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011년 피해자 지원 현황 : 심리적지원(42,290명, 57.2%), 수사·법적 지원(12,043명, 16.3%), 의료지원(1,138명, 7.7%)

새누리의 약속

-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2012년 10명→2017년 27명)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 방지
-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등으로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현상을 개선하고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거주이전 지원 강화, 피해자 간병목적 돌봄서비스 지원,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부대비용 지원 실시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지원

새누리의 실천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행률은 오히려 감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비율 41.3%(2010년) → 48.1%(2011년)

새누리의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매매 단속강화 체계 구축

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새누리의 진단

-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찰 인력 증원은 답보상태
- 잦은 야간 및 휴일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높은 위험과 스트레스 등 경찰 직의 직무특성이 보수에 반영되어 있지 못함.
 - 미국·일본 등은 경찰관들의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직 대비 20% 이상 우대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및 2014년도 예산 반영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새누리의 진단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화재 및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 3년 간 발생건수 113만건, 사망자 2만8천여명에 달함.
- IT, 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이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 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 구축
-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새누리의 실천

-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 구조 개편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새누리의 진단

- 국민의 생활 변화로 3대(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질환자의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음.
- 심폐소생(CPR)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가 부족하고, 도서·산간 고립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존
 - 우리나라 국민심폐소생술 실시율은 1.4%로 OECD 국가 평균 20% 대비 극히 저조

새누리의 약속

-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 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새누리의 실천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 개정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새누리의 진단

-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식품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세
- 식품이력추적 관리의 낮은 실시도 및 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

새누리의 약속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효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새누리의 실천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